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노 지 현(Jee-Hyun Rho)**
조 용 완(Yong-Wan Cho)***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I. 서론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요구
II. 공동보존서고의 의미	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III.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장 실태	V.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1. 소장자료의 규모	1. 기본방향의 설정
2. 자료 수장공간의 규모	2.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안)
3. 수장공간 부족률	3.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안)
IV. 문제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인식과 요구	VI. 결론

초 록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지역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책임을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행법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였거나 지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세밀히 검토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2)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다음, (3) 국내외의 대표적인 공동보존서고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Library Act, a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is fully responsible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ll collections held by local libraries. It intends to resolve space problem for collections and to prepare room for new materials in local libraries. Under the Act, a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should make a plan for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to accommodate overflows from local library collections as soon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regional repository library' as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of local library collections, and to suggest the proper solutions for developing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with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the end, this study (1) examined the extent of space shortage in local libraries of Busan, (2) assessed the needs of both local libraries and library users for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and finally, (3) suggested the detailed procedure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Keywords: Regional repository library, Regional storage center, Regional storage facility,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Cooperative library collection storage,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 이 연구는 2012년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지원으로 수행한 『부산시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제1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yongwan@cu.ac.kr)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3년 5월 20일 • 최종심사일: 2013년 5월 27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I. 서론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과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등을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하고 그 운영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역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까닭은 많은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였거나 지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의 마련은 차치하고 건립의지를 표명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산광역 시도 마찬가지로, 2008년 4월 29일에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료의 공동보관 및 보존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공공도서관들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로 인하여 자료실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다.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 정도만 예외일 뿐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더 이상 자료를 소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적·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이 도서관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공간에 문화행사 및 교육을 위한 강의실이나 소규모 강당(auditorium), 인포메이션 코먼스(information commons)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만 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놓여 있다. 부산시의 도서관 관계자들 또한 지역 도서관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국내에는 참조할 만한 사례가 없으며,¹⁾ 외국의 사례 또한 우리의 여건이나

1) 국내에서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를 계획한 최초의 사례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3개 도립도서관(경

상황과는 너무나도 상이하여 이를 참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세밀히 검토하고,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모델 및 운영 방안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자료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2)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다음, (3) 국내외의 대표적인 공동보존서고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제안하였다.²⁾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각종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보존서고의 이론적 타당성과 국내외 도서관들의 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공간 부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였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없는 통계자료는 개별 도서관으로부터 직접 구하였다. 이어, 정책적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도서관과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입장은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서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자의 의견은 부산지역의 23개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서는 186명이었으며, 이용자는 총 707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이 도출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II. 공동보존서고의 의미

공동보존서고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의 자료를 옮겨 공동으로 보관 또는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서고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은 현재 매우 다양하면서도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 용어 자체가 애초에 우리와는 문화적 토양이 다른 서구에서 들여온 개념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서구에서조차 공동보존서고의 설립목적이나 운영주체, 참여 도서관의 범위와 유형, 자료수장 방식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도립중앙도서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부산시의 경우 개별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모형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되, 향후 지역 내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보존서고'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령,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³⁾에서 공동보존서고에 해당하는 용어를 모두 찾아보면, 'storage center,' 'deposit library,' 'reservoir library,'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storage center'는 "도서관의 장소 중에서 저이용 자료들을 이관하여 공동으로 수장하는 시설"이라 설명되어 있다. 'deposit library'와 'reservoir library'는 이 용어사전에서 'storage center'와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는 "참여 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 도서관에서 널리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유지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어, 개념적으로 storage center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소유권을 원 소유 도서관이 가지는 storage center와 달리 공동보존서고에 수장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보존서고에서 가지는 것"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자료의 소유권에 따라 'storage center'와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의 관련 연구나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앞의 용어 이외에도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remote storage facility", "off-site storage facility", "shared statewide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cooperative remote storage", "regional library center"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공동보존서고의 설립형태와 목적, 운영 방식, 기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와 사례 분석만으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공동보존서고'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먼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는 '공동보관소'와 '공동 집서 시설'라는 용어가 등록되어 있다.⁴⁾ 전자는 "도서관 간에 상호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 도서관들의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로, 그리고 후자는 "여러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유지하는 시설. ... 중략 ... 공동보관소와는 달리 수집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을 이 시설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공동보관소'는 ALA glossary에서 살펴본 storage center를, 그리고 '공동 집서 시설'은 cooperative collection resource facility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연구나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등재된 '공동보관소'나 '공동 집서 시설'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공동보존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관'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동보존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현민과 신지연·김유승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3)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hicago : ALA, 1983).

4)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공동보존도서관은 “상호협력체제에 참여한 도서관들의 소장공간 부족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⁵⁾과 “보안과 보존환경이 통제된 시설을 통해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는 도서관”⁶⁾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박동철, 윤희운 등의 연구에서는 ‘공동보존도서관’ 대신 ‘공동보존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⁷⁾, 앞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어 공동보존서고와 공동보존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실정법을 비롯하여 각종 도서관발전계획에서는 ‘공동보존도서관’이 아니라 ‘공동보존서고’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달리 자료의 보관 및 보존을 중심으로 계획된 시설이라는 점과 실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공동보존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외의 관련 연구와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⁹⁾ 이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서고를 “도서관 공간부족 해소 및 자료의 수명 연장, 자료의 공동 이용 등의 목적으로 우수한 보존 및 보안환경을 갖추고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보존가치가 있는 저이용 자료와 귀중자료, 희귀자료 등을 이관받아 수장하는 서고 시설”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장 실태

1. 소장자료의 규모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5개의 분관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공공도서관(교육청 소속 14개 관, 자치단체 소속 15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는 총 4,220,583책이다(2012년 9월 30일 기준). 이를 운영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전체 장서의 67.9%인 2,867,770책을, 그리고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전체 장서의 32.1%인

5) 강현민,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31-33.

6)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pp.129-150.

7) 박동철 등의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서고’를 “여러 개의 도서관이 서로 합의한 기준과 목표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 운영, 소유권, 서비스 등의 제반 영역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박동철,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p.38).

8)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9) 국내외의 관련 연구와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동보존서고는 여러 도서관의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보관)하면서 참여 도서관의 공간부족 해소뿐 아니라 우수한 보존환경을 통한 자료의 수명 연장과 수장된 자료의 공동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장 대상 자료는 주로 저이용 자료이지만 우수한 보존환경을 필요로 하는 귀중자료와 희귀자료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시설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도서관보다 우수한 보존환경이나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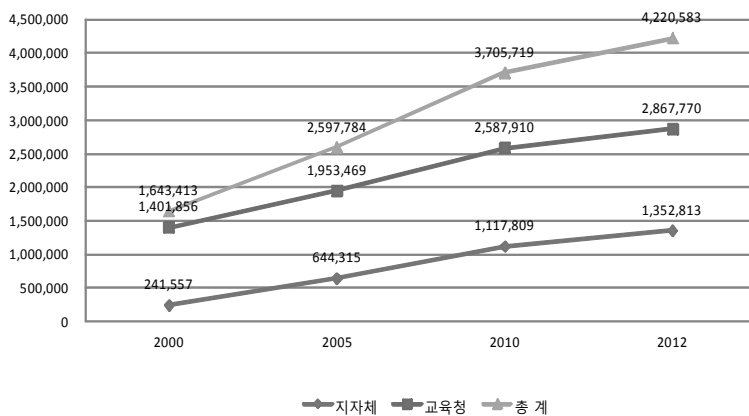
1,352,813책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의 규모는 평균 204,840.7책을 소장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평균 90,187.5책을 소장하고 있는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표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장서량

운영주체	도서관 수	총 장서량	1관당 평균 장서량
교육청 소속	14	2,867,770	204,840.7
자치단체 소속	15	1,352,813	90,187.5
전체	29	4,220,583	145,537.3

2012년 9월 30일기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지난 12년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1,643,413책이었던 자료가 2012년 9월에 4,220,583책으로 증가하여 1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2,577,170책(156.8%)이 증가하였다. 이를 운영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 1〉과 같이 자치단체 도서관의 경우 2000년에 241,557책이었던 장서가 2012년에는 1,352,813책으로 늘어나 1,111,256책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2000년에 1,401,856책이 2012년 2,867,770책으로 늘어나 10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1,465,914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2년 동안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장서는 무려 4배 이상, 그리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연간 장서증가량(2000-2012)

이처럼 엄청난 속도도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동일 기간에 자료폐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공공도서관들은 ‘매 1년마다’ 또는 ‘매 2년마다’ 자료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폐기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파손자료’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자료의 양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각 도서관에서 폐기된 자료는 최소 98책부터 최대 15,000책으로써, 부산시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폐기된 자료는 총 89,626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대표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1인당 장서수가 기준에 도달하면 연간 증가책수(기본장서의 10%)만큼을 폐기하여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공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¹⁰⁾는 『한국도서관기준』이나,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 접근·용의 편의 제고, 그리고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를 위해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을 할 수 있다”는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7호)와 달리, 현실적으로 자료폐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¹¹⁾

2. 자료 수장공간의 규모

다음으로,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장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의 자료실은 자료 수장공간 이외에 열람테이블이나 검색용 PC, 직원의 업무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순수’ 자료 수장공간만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부득이 자료실(각종 ‘자료실’과 ‘보존서고’)의 전체 면적을 자료 수장공간으로 간주하였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건물 연면적은 다음 <표 2>와 같이 총 90,205㎡이며, 1관당 평균 연면적은 3,110.5㎡이다. 이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이 3,517.3㎡로 자체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2,730.9㎡보다 다소 넓다. 이 가운데, 자료의 수장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연면적의 33.1%(총 29,8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의 공간요소별 면적배분 기준』에서 제시하는 자료실의 비율은 연면적의 40%이나, 최근 이용자 편의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자료실 공간의 상대적 축소가 불가피하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평균 자료수장 공간이 연면적의 30%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¹²⁾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면적은 지극히 보편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도

1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 13.

11) 이처럼 자료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고,” “자료폐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전무하며,” “폐기에 대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무엇보다 “폐기대상자료에 대한 잠재적 요구와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도서관계 일각에서는 도서관이 겪고 있는 공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기적인 ‘자료폐기’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렇듯 자료폐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무엇보다도 자료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료폐기는 공간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윤희윤,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2), p.57.

서관 공간에 자료 수장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표 2〉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대비 자료실 면적

도서관명	면적(m ²)				비율(%)		
	건물 연면적	일반 자료실 면적(①)	보존서고 면적(②)	자료실 총 면적(①+②)	일반 자료실 비율(③)	보존서고 비율(④)	자료실의 총 비율(③+④)
교육청 소계	49,242	14,464	2,255	16,719	29.37%	4.58%	33.95
지자체 소계	40,963	11,335	1,845	13,180	27.67%	4.50%	32.17
계	90,205	25,799	4,099	29,898	28.60%	4.54%	33.14

3. 수장공간 부족률

이러한 소장자료의 규모와 자료 수장공간의 규모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한계수장량'과 그에 따른 '수장공간 부족률'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한계수장량은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라 일반 자료실의 서고(개가제 서고)는 1㎡당 111책을, 보존서고(폐가제 서고)는 1㎡당 170책을 적용하였다(수장을 85% 기준). 가령,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2012년 9월 현재 723,030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소장하는 자료실의 면적은 일반 자료실 3,780㎡와 보존서고 593㎡이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수장량은 일반 자료실에 소장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수장량인 419,580책(3,780㎡×111책)과 보존서고에 소장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수장량인 100,810책(593㎡×170책)을 합쳐 총 520,390책이 된다. 그러나 현재 시민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인 723,030책은 한계수장량을 초과하므로 초과 비율인 39%를 '수장공간 부족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산시 공공도서관들의 수장공간 부족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2012년 9월 현재 부산시의 29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무려 18개관이 이미 수장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에는 2009년과 2010년에 신설된 2개 도서관(중앙도서관분관부산영어도서관, 해운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데,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서동도서관,' '구덕도서관,' '연산도서관,' '반송도서관,' '사하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률이 이미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여도서관'과 같이 수장공간 부족률이 100%를 초과한 도서관이 있는 반면 금정도서관, 영도도서관, 기장도서관, 다대도서관, 화명도서관 등과 같이 30%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진 도서관도 있어 자치단체 도서관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한계수량과 수장공간 부족률

도서관명	한계수량 (책)			현재 수장량(책)	수장공간 부족률	비고 (개관년도)
	일반서고 한계수량	보존서고 한계수량	전체 한계수량	2012년 9월 기준	2012년 9월 기준	
시민도서관	419,580	100,810	520,390	723,030	-39%	1982
구덕도서관	39,237	23,542	62,779	158,512	-152%	1978
반송도서관	64,935	15,300	80,235	179,843	-124%	1978
부전도서관	144,999	45,509	190,508	269,223	-41%	1982
해운대도서관우동분관	44,616	7,395	52,011	136,373	-162%	1982
서동도서관	37,518	13,219	50,737	130,910	-158%	1983
구포도서관	232,733	17,490	250,222	265,998	-6%	1983
사하도서관	59,940	7,990	67,930	144,425	-113%	1984
연산도서관	51,023	17,170	68,193	152,514	-124%	1987
중앙도서관	141,081	40,630	181,711	284,637	-57%	1990
명장도서관	64,380	23,664	88,044	172,514	-96%	1994
중앙도서관수정분관	55,611	9,860	65,471	98,056	-50%	1999
부산영어도서관(중앙분관)	59,385	5,950	65,335	44,768	+31%	2009
해운대도서관	190,494	54,743	245,237	106,967	+56%	2010
소계(교육청 소속)	1,605,533	383,272	1,988,805	2,737,375	-44%	
금정도서관	189,921	91,800	281,721	169,471	+40%	1996
영도도서관	147,304	40,800	188,104	131,892	+30%	1996
남구도서관	127,095	0	127,095	160,682	-26%	1997
동구도서관	55,389	5,100	60,489	83,151	-37%	1998
강서도서관	51,504	0	51,504	67,781	-32%	1998
반여도서관	38,305	0	38,305	81,914	-114%	1999
수영구도서관	89,466	0	89,466	84,928	+5%	2002
북구디지털도서관	115,185	11,322	126,507	104,607	+17%	2002
사상도서관	78,994	17,000	95,994	98,357	-2%	2003
기장도서관	109,255	67,616	176,871	125,504	+29%	2003
개송어린이도서관	39,139	6,800	45,939	81,704	-78%	2006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54,390	0	54,390	36,235	+33%	2009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25,075	0	25,075	17,655	+30%	2009
다대도서관	65,490	35,020	100,510	48,655	+52%	2010
화명도서관	71,634	38,158	109,792	60,308	+45%	2010
소계(자치단체 소속)	1,258,145	313,616	1,571,761	1,352,813	+14%	
총 계	2,863,678	479,623	3,343,301	4,220,583	-19%	

('+' 는 수장공간에 여유가 있음을, '-' 는 수장공간이 부족함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장서증가량을 예측한 후 그에 따른 수장 공간의 부족 정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2000년부터 2010년 까지의 연평균 장서증가량을 산출한 후(7.51%)¹³⁾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소장자료의 규모를 예

13)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전년도 대비 장서증가율은 평균 8.37%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포함된 개별 도서관의 장서증가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규 개관한 도서관의 장서증가율이 비정상적이라는 사

측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까지의 수장공간 부족률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공간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장서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2010년에 개관한 단 3개의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들이 심각한 공간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장공간 부족률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 앞으로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2020년에 이르면 현재의 157%에 해당하는 자료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보다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2015년에 한계수장율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현재의 54%에 해당하는 자료실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부산시 도서관계에서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처해 있는 공간부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료의 보존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동’ 보존서고의 건립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4〉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률 예측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청 소계	-44%	-55%	-67%	-79%	-93%	-107%	-123%	-139%	-157%
자치단체 소계	+14%	+7%	+1%	-7%	-15%	-24%	-33%	-43%	-54%
전체	-19%	-27%	-37%	-47%	-58%	-70%	-83%	-97%	-112%

IV. 문제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인식과 요구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득력을 가진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서관계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없다면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이번에는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중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 또는 현재 각 도서관마다 자체 보존서고에 수장된 자료를 공동 시설로 옮기고, 그 공간을 새로 늘어나는 자료의 수장이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서들과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이 부산지역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장서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신규 개관한 도서관의 경우 개관 이후 몇 년 동안 일시적으로 많은 자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 도서관의 장서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웃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서증가율은 평균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지난 12년간 평균 장서증가율은 7.51%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장서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2년에 4,220,883책인 소장자료는 2020년이 되면 7,531,892책에 이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요구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산시 공공도서관(분관 포함 29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는 총 186명이 응하였으나, 결측치가 50% 이상인 1명을 제외하고 18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보다 세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면담조사는 본 연구팀에서 선별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실무진, 그리고 시민도서관의 도서관정책부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공동보존서고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 후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동보존서고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8.7%(164명)가 '상당히 필요'하거나 '다소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필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보다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의견

필요성	전체		교육청		자치단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당히 필요함	120	64.9%	95	74.2%	23	42.6%
다소 필요함	44	23.8%	24	18.8%	19	35.2%
보통	12	6.5%	6	4.7%	6	11.1%
필요 없음	7	3.8%	3	2.3%	4	7.4%
전혀 필요 없음	2	1.1%	0	0.0%	2	3.7%
합계	185	100.0%	128	100.0%	54	100.0%
5점 척도	4.48	-	4.65	-	4.06	-

이와 더불어,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시기에 대한 사서들의 생각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83.8%가 '가급적 빨리' 또는 '향후 5년 이내'에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료수장 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건립 시기에 있어서도 공간 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에 비해 '가급적 빨리' 건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공동보존서고에 거는 기대는 이

처럼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 보존서고의 건립이 '자료의 보존수명 연장'과 '회귀자료의 집중적 수집,' '개별 도서관 장서의 신선도 유지,' 그리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한 이용자서비스 증대' 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사서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방식은 '독립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과 '폐교나 창고 등 기존 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개축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 서고나 인근 부지에 공동보존서고를 증축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건립 방식에 대해,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의 77.8%는 공동보존서고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의 신축'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한 공동운영'(14.6%)이나 '부산시 직영'(11.9%) 보다 '지역대표도서관'이라 답변한 응답자가 월등이 많았다(응답자의 68.6%).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대표도서관' 이외에 '협의체를 통해 참여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이, 그리고 '부산시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사서들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집단 간에 미세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어,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도서관에 일정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복본자료에 대해서는 일정 자료만 보존하는 통합 운영 방식'을 크게 선호(8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 및 자료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사서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공동보존서고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관리전환형'에 대한 선호도(36.2%)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약에 따라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27.6%)이나 공동보존서고와 이관 도서관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혼합형' 방식(22.2%),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였더라도 원 소유 도서관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는 방식(14.1%)을 선호하는 사서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6) 참조).

〈표 6〉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

소유권	전체		교육청		자치단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동보존서고	67	36.2%	52	40.6%	15	27.8%
협약에 따른 재량권	51	27.6%	34	26.6%	16	29.6%
공동소유	41	22.2%	27	21.1%	14	25.9%
이관 이전의 소장 도서관	26	14.1%	15	11.7%	9	16.7%
합계	185	100.0%	128	100.0%	54	100.0%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실정법'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도서관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공간 문제에 의해서만 발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통해 도서관 자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요구로 드러난 것임을 면담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생각에 이어, 이번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였다.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이용자의 의견은 향후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29개 공공도서관(분관 포함) 중에서 5개 분관과 설문조사 기간에 임시 휴관하였던 1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23개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관별 응답자의 수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20명에서부터 많게는 50명까지였으며, 총 707명의 이용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기에 앞서, 본 연구팀은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면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표 7>과 같이 ‘자료실’ 공간과 ‘열람실’ 공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에 각각 2.74, 2.63). 이용자들은 소장자료의 양에 비해 자료 수장공간이 부족하며, 열람실이나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과 같은 이용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이어,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개별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표 3>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간 부족 정도에 따라 A, B, C 세 개의 그룹(부족의 정도가 심함, 보통, 부족하지 않음)¹⁴⁾으로 구분한 후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전체 공간’이나 ‘직원 업무 공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료실 공간’과 ‘이용자 공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5% 신뢰수준, $p < 0.05$). 연구팀의 예상대로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판별되었던 A그룹에 속하는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표 3>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장공간이 96% 이상 부족한 도서관을 ‘A그룹’으로, 수장공간이 0-95% 부족한 도서관을 ‘B그룹’으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수장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도서관을 ‘C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A그룹에는 7개의 도서관이, B그룹과 C그룹에는 각각 8개의 도서관이 편성되었다.

〈표 7〉 도서관의 각 공간 구성 및 면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항목	전체		자료실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만족한다	61	8.6%	1	0.1%	0	0.0%	2	0.3%
만족한다	328	46.4%	85	12.0%	80	11.3%	41	5.8%
보통	242	34.2%	380	53.7%	330	46.7%	525	74.3%
다소 불만족스럽다	70	9.9%	210	29.7%	252	35.6%	128	18.1%
매우 불만족스럽다	5	0.7%	31	4.4%	44	6.2%	6	0.8%
무응답	1	0.1%	0	0.0%	1	0.1%	5	0.7%
합계	707	100.0%	707	100.0%	707	100.0%	707	100.0%
5점 척도	3.52		2.74		2.63		2.86	

다음으로,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용자들은 공동보존서고의 의미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설문 항목은 가급적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구성하였다. 우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자료는 다른 장소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도서관에는 이용률이 높은 자료나 최신 자료 위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응답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5.1%,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15.0%’로 나타나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질문에 대한 사후검증에서 A그룹과 C그룹 간, B그룹과 C그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A그룹과 B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의견

항목	전체		A그룹		B그룹		C그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적극 찬성	109	15.4%	27	13.5%	44	16.1%	38	16.2%
찬성	422	59.7%	107	53.5%	179	65.6%	136	58.1%
모름	69	9.8%	25	12.5%	16	5.9%	28	12.0%
반대	97	13.7%	38	19.0%	31	11.4%	28	12.0%
적극 반대	9	1.3%	3	1.5%	2	0.7%	4	1.7%
무응답	1	0.1%	0	0.0%	1	0.4%	0	0.0%
합계	707	100.0%	200	100.0%	273	100.0%	234	100.0%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자료를 보관할 서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확충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에서

는 각 도서관에서 자주 이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보존설비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부산 지역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후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80.5%가 ‘찬성’하였으며,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이용자는 전체의 7.2%(51명)에 불과하였다.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을 찬성한 이용자들은 주로 “자료 이용의 편의성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공간의 확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이용자들은 “자료의 분산배치로 인한 이용의 불편”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하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먼저, 필요로 하는 자료가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 이용자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수 경로에 대한 항목 구성은 국내외 공동보존서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참고하여, ①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배달 서비스, ②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자료복사서비스, ③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서비스, ④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이 들더라도 신속한 서비스’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용이 저렴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지금부터는 국내외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사례를 참조하되, 앞서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부산시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동보존서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형태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도출한 ‘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쳤다.¹⁵⁾

15) 본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공공도서관 실무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회의는 2012년 12월 11일에 「지역대표도서관 세미나」에서 본 연구팀이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도서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2013년 1월 16일에 10명의 실무자 대표를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도서관 또는 기록관 실무자, 건축 전문가 등을 개별적으

1. 기본 방향의 설정

현재 국내외에 건립된 공동보존서고가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는 개별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한 부’(last one copy)를 효율적으로 보관 또는 보존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서비스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이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보존서고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존서고의 형태나 규모, 운영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부산지역 도서관계가 처한 상황이나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향후 인쇄자료의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되, 인쇄자료의 생산과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전자자료로 대체될 경우 실물 인쇄자료의 물리적 보관 또는 이를 위한 공간 확보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10년’을 1단계 목표기간으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모형을 마련하였다.

둘째, ‘향후 10년’을 목표기간으로 설정하되, 공동보존서고의 규모와 참여 도서관의 증가로 인한 확장성(expansibility)과 신축성(flexibility)을 고려하였다. 이는 당장의 수요 뿐 아니라 향후 공동보존서고의 규모와 참여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동보존서고의 추가 확장이나 증축을 통한 수장공간의 확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고 모듈의 추가 증설을 통해 향후 공동보존서고를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¹⁶⁾

셋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치’ 자료의 공동 보관 및 이용을 위한 방안과, 귀중자료나 희귀자료와 같이 보존 가치가 현저한 자료의 통합 보존을 위한 방안을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고문서나 일제시대의 자료는 주로 한두 도서관에 집중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보존 문제는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당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서고에서 저가치 자료와 귀중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저가치 자료만을 공동보존서고에 이관하는 방안을 별도로 다룬 후, 결과적으로 부산시 도서관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별도로 언급하였다.¹⁷⁾

로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건립 또는 운영 모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16) 국외에서 운영되는 공동보존서고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고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그에 적합한 적정 규모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목표년도에 도달하거나 서고 공간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면 2단계, 3단계... 식으로 서고 모듈을 점차 증설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 서고에 바로 인접하여 2단계, 3단계 서고가 설치될 수 있는 부지를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확보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고를 서로 인접하게 하여 확장해 나가는 이유는 향후 수장자료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당초에 설치되었던 업무공간, 이용공간, 공유공간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자료 수장공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넷째,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개별 도서관에 일정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관된 자료를 '통합'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이는 여러 도서관에서 이관해 온 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료만을 '선별'하여 보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자료의 이관 및 폐기 기준, 이관자료의 소유권, 이관자료의 정리와 배가, 이관자료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해법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일차적으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의 모델을 마련하되,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보존서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동보존서고는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보존서고로 출발하되 향후 지역 내 다른 관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안)

가. 설립 형태

실정법과 관련 연구를 참조할 때, 공동보존서고는 (1) 지역대표도서관을 증축하거나 (2) 지역대표도서관의 인근 부지에 별관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관리가 용이하고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시민도서관의 위치와 입지, 건물구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인근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은 (1) 부산시내의 다른 곳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2) 폐교나 기타 교육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3)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업자의 물류창고를 장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민간업자의 물류창고를 대여하는 방안은 부산 지역에서 적절한 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보존서고가 단순히 이관자료의 수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의 수집과 선별, DB구축, 자료제공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리적 여건과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도서관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의 최종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마련하였다.

1안: 현재의 시민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을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

- 17) 귀중자료의 경우 개별 도서관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고, 특별한 보존설비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의 공동보존서고에서는 대부분 귀중자료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자료나 희귀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존환경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도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공동보존서고에서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시 지역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은 1982년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이 건물은 이미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향후 유지 보수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와 접근성, 공간구조와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 도서관이 가진 제반 여건은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부산을 상징할만한 랜드마크로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새로이 신축하고, 현재의 시민도서관을 공동보존서고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의 행정기관이 위치한 新도심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고, 현재의 건물을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한다면,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물론이고, 신축될 지역대표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하게 될 현재의 도서관이 비교적 인접 위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최적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2안: 도심 외곽지에 독립 건물로 공동보존서고를 신축하는 방안

국내외 도서관들 중에는 공동보존서고의 부지를 확보하고 서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용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거나 폐쇄된 건물을 저가로 또는 무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애초에 서고의 적재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자료보존에 부적합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자료의 훼손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폐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한 사례도 기능성과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교 등 기존 시설의 부지만 활용하고, 건물은 공동보존서고의 용도에 맞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 폐교나 이전으로 활용가능한 교육시설 중에서 이동성, 접근성, 건축용이성,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부지가 있다. 현재의 시민도서관과 18km 떨어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의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의 접근이 우수하며, 무엇보다도 무상대부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와 안전성,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귀중자료'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적정 시설을 갖추어 보존하면서 상시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동보존서고는 저이용 자료들에 대한 보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안: 기존의 도서관 건물을 개축하여 부속 시설로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도서관 건물을 개축할 때 공동보존서고를 개축 건물의 부속 시설로 설립하는 것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 1~2층을 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할 계획을 가졌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지하 서고를 자료보존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개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지하 공간에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현재 개축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에 적합한 규모와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하 4층의 규모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지하 구조물은 방수나 제습 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며, 깊이가 깊어질 경우 높은 지하수위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지상 건물에 비해 건립에 2~3배의 많은 비용과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제약 사항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측면에서도,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은 지역대표도서관에 있지만 서고의 관리는 해당 도서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운영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보존서고의 향후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 안은 다소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건축 규모

공동보존서고의 건축 규모는 목표년도와 예상 수장책수, 서고 유형, 기타 필요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1단계 목표년도를 '향후 10년'으로 설정하여 예상 수장책수를 산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장하기 위한 서고의 유형으로 국내 도서관들의 보존서고에 사용하는 '이동식 모빌서가'(모빌랙)와 국외의 공동보존서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밀집서가'(수동형/자동형)를 적용하여 각각의 예상 서고 면적을 추정하였다. 이어, 공동보존서고에 적합한 공간 배분 기준(서고공간, 업무공간, 이용공간, 공유공간)을 적용하여 공동보존서고의 전체 건축규모를 산출하였다.

1) 예상 수장책수

예상 수장책수를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직후 일괄 이관할 자료의 규모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의 규모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직후 이관해야 할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① 현재 각 도서관의 '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총 855,547책)와 ② 대출자료 분석을 통한 '저이용 자료'(약 30만 책)¹⁸⁾를 파악하고, 이에 덧붙여 ③ 각 도서관의 '한계수장량을 초과하는 자료'의 규모(총 1,192,067책)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①, ②, ③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는 상당 부분 겹치므로 예상되므로 '최대치'인 ③을 토대로 하여, 각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 간의 중복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 자료에 대해 '2책'을 공동보존

18)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저이용 자료'는 '대출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난 2년간 각 도서관에서 대출된 자료의 '발간년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대출한 자료의 80%는 '2001년 이후에 발간된 자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이후에 발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2년간 대출된 자료의 89%가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팀은 '저이용 자료'를 '199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로 간주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대출을 희망하는 자료의 약 90%는 개별 도서관에서, 그리고 10%는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고로 이관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될 자료의 비율은 전체의 7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를 ③에 적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의 규모는 '93만 책'에 이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이관될 자료를 '1991-2000년에 발간된 자료'라 가정하고,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복율을 산출하였다(중복율 75.0%). 그 결과 향후 10년간 이관될 자료의 규모는 약 67만 5천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앞서 산출한 건립 직후 이관해야 할 자료와 합산하면,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적어도 '160만 책'을 수장할 수 있는 서고의 규모를 갖추어야만 향후 10년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예상 서고 면적

예상 수장책수를 근거로 하여 향후 10년간 운영할 '1단계' 공동보존서고의 서고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서고 면적은 국내 도서관들이 자체 보존서고에 사용하는 '이동식 밀집서가'(모빌랙)와 국외의 공동보존서고에서 널리 사용하는 '고밀집서가'(수동형, 자동형)²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출하되, 자료의 이관 처리나 자료 제공을 위한 준비 공간, 귀중자료의 보존²¹⁾ 등을 위해 '일반서고'의 면적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 일반서고는 향후 수장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이동식 밀집서가나 고밀집서가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공동보존서고의 건축 규모를 산정하는데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밀집서가와 일반서가의 비율을 7 : 3으로 산정하고 서고 면적을 각각 산출한 결과, 이동식 밀집서가(모빌랙)는 4974.6㎡(1504.8평), 그리고 고밀집서가는 3132.3㎡(947.5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참조).²²⁾

19) 중복율을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1971-1990년에 발간된 자료' 중에서 샘플 레코드(1,020건)를 추출한 후 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수를 조사하였다. 샘플 레코드를 토대로 부산지역 29개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을 실시한 결과, 동일 자료에 대해 2책을 공동보존서고에 수장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의 비율은 전체 자료의 7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고밀집서가'는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물류창고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일반서고의 10~15배, 이동식 밀집서가(모빌랙)의 4배 이상 자료수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높은 자료 수장력으로 인해 국외의 공동보존서고에서는 대부분 고밀집서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고밀집서가는 자료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방식에 따라 '수동형 고밀집서가'와 '자동형 고밀집서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동형 고밀집서가'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그리고 '자동형 고밀집서가'는 사람 대신 자동화된 로봇시스템이 자료의 반입과 반출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형 고밀집서가'는 하버드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기에 '하버드 모델'이라고도 부르며, '자동형 고밀집서가'는 'ASRS 시스템'(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이라고도 부른다.

21) 가령,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타도서관에서 이관해온 자료는 이동식 밀집서가에 보관하고 있지만, 귀중자료는 향온향습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체 제작한 오동나무 서가(일반서가형)에 보존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관에서도 귀중자료는 각 자료의 크기에 맞춘 보존상자에 담아 일반서가에 가로로 수장하고 있다.

22) 일반적으로 일반서가의 경우 1㎡당 189책을, 그리고 이동식 밀집서가의 경우 1㎡당 460책을 수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밀집서가의 수장가능 책수는 일반서가의 10-15배라고만 알려져 있어, 이 연구에서는 고밀집서가의 수장책수를 일반서가의 '10배'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적용할 경우, 1책을 수장하는데 필요한 면적은 일반서

〈표 10〉 이동식 밀집서가(모빌랙)의 적용

구분	산출내역
수장책수	밀집서가 수장책수 : 160만권 \times 0.7 = 1,120,000권 일반서가 수장책수 : 160만권 \times 0.3 = 480,000권
서고면적	밀집서가 1,120,000(권) \times 0.002174(m ²) = 2,434.9m ² 일반서가 480,000(권) \times 0.005291(m ²) = 2,539.7m ²
계	밀집서가의 공간 2434.9m ² + 일반서가의 공간 2539.7m ² = 4974.6m ²

〈표 11〉 고밀집서가의 적용

구분	산출내역
수장책수	고밀집서가 수장책수 : 160만권 \times 0.7 = 1,120,000권 일반서가 수장책수 : 160만권 \times 0.3 = 480,000권
서고면적	고밀집서가 1,120,000(권) \times 0.0005291(m ²) = 592.6m ² 일반서가 480,000(권) \times 0.005291(m ²) = 2,539.7m ²
계	고밀집서가 592.6m ² + 일반서가 2539.7m ² = 3132.3m ²

3) 공동보존서고의 연면적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의 공간 배분 기준은 [서고 공간 40% + 업무 공간 10% + 이용공간 30% + 공유공간 20%]이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도서관의 기준 이어서 공동보존서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체 면적의 50~70%를 서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외의 사례를 참조하되,²³⁾ 향후 서고 공간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외 사례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50%를 서고 공간으로 적용하였다. 서고 공간에 50%, 그리고 업무공간과 이용공간, 공유공간을 합쳐 50%를 배정하여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연면적을 산출한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이동식 밀집서가를 설치할 경우에는 9949.2m²(3009.6평)가, 고밀집서가를 설치할 경우에는 6264.6m²(1895평)의 연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0.005291m², 이동식 밀집서가 0.002174m², 고밀집서가 0.0005291m²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3) Scott Seaman, "High-density off-site storage in North American research libraries", *The 25th IATUL Annual Conference*(May 30-June 3 2004), p.3. <http://www.iatul.org/doclibrary/public/Conf_Proceedings/2004/Scott20Seaman.pdf> [cited 2012. 1. 30]

〈표 12〉 공동보존서고의 연면적 산출 근거

서고 유형	공간 배분	1단계	비고
		160만 책 기준	
이동식 밀집서가 (모빌랙)	서고공간	4974.6㎡	서고공간과 나머지 공간의 배분 기준 = 50% : 50%
	업무공간	4974.6㎡	
	이용공간		
	공유공간		
	계		
고밀집서가	서고공간	3132.3㎡	
	업무공간	3132.3㎡	
	이용공간		
	공유공간		
	계		

3.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안)

가. 운영체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체제,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로 대규모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한 후 지역의 도서관들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 이 경우 '대표'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소유하며, 서고의 관리와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²⁴⁾

둘째,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방식.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책은 법인에서 결정하며, 서고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외부의 재원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과 같이 별도의 독립 재정을 확보하여 집행한다.²⁵⁾

셋째, 공동보존서고를 참여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나가는 방식. 공동보존서고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주정부, 고등교육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참여 도서관들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²⁶⁾

부산시에 적합한 운영 체제를 모색하는데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24)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미국의 FLorida Academic REpository(FLARE), PASCAL, NRLF 및 SRLF, 일본의 滋賀縣立図書館 資料保存センター, 神奈川縣立 川崎図書館 科學技術系 外國語雜誌デボジットライブラリー, 多摩地域 共同利用圖書館 등이 있다.

25)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CTLes, 스페인의 GEPA, 핀란드의 NRL 등이다.

26)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호주의 CARM Centre, 영국의 UKRR, 미국의 WRLC와 ReCAP이다.

경우 이미 실정법에 '지역대표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에 대해 책임 질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관리하되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는 참여 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다만, 이러한 운영 체제에서는 참여 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을 위한 합의체 정책결정기구로서 '(가칭)공동보존서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실무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의 주요 사례를 참조할 때 '(가칭)공동보존서고 운영위원회'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이 위원회의장이 되어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적정 수의 위원을 선출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는 외부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보존/복원 전문위원회', '매체변환 전문위원회' 등과 같이 특정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칭)자료의 공동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가칭)공동보존서고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업무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자료의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서에는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합의하여 결정한 '이관 대상 자료의 유형과 규모, 이관 주기, 이관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관리 기준, 자료의 제적과 폐기 기준, 자료 이용 기준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공동보존서고의 운영규정에는 '공동보존서고의 목적과 임무, 조직체계, 주요 업무(자료의 이관과 수집, 자료 관리, 자료의 제적과 폐기, 자료와 시설의 이용, 문헌제공서비스 등)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정서와 운영규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개별 도서관에서는 각자의 『도서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공동보존서고로의 자료 이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상호협정과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일차적으로는 부산지역 29개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하고, 향후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협정 체결을 통해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자료 이관 방안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방식은 개별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선정하여 이관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동보존서고에서 이관대상자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만 이관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지 않은 채 자체 폐기하거나 이관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이관대상자료의 기준을 수립하고, 각 도서관으로부터 이관희망자료의 리스트를 일단 공동보존서고로 송부하도록 한

후 공동보존서고에서 보존할 자료와 폐기할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국외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사례와 자료폐기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아래 <표 13>과 같이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관기준인 “20/5/MUSTED*”는 모든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주제별 또는 자료 유형별로 일정 정도 변형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자료의 목록에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표기하도록 한다면²⁷⁾ 공동보존서고에서 자료를 선별하거나 폐기할 때 이를 근거로 이관자료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자료이관 기준

기준	설명
20	발행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5	마지막으로 대출(이용)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료
M (Misleading)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U (Ugly)	파손 및 오·훼손이 심한 자료
S (Superseded)	새로운 판(edition)으로 대체된 자료
T (Trivial)	개별 도서관에서 장기간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I (Irrelevant)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절한 자료
E (Elsewhere)	웹 등 다른 정보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D (Duplicated)	복본이 과다한 자료
*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이관을 요청한 자료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를 선택하고 나면,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이관할 자료와 폐기할 자료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도서관에서는 폐기대상 자료를 포함하여 이관을 희망하는 자료에 대한 리스트를 ‘연 1회’ 또는 ‘6개월’ 주기로 공동보존서고에 제공하고, 자료의 이관 또는 폐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동보존서고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중복자료에 대해 앞서 언급한 ‘이관 기준’이나 ‘자료의 물리적 상태’²⁸⁾를 참고하여 물리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자료를 선

27) 예를 들어, ‘20년이 경과하였고, 새로운 판으로 대체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로 이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20/S”로, 지역대표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8) 호주의 CARM Centre와 스페인의 GEPA에서는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송부하는 이관대상자료 리스트에 자료의 ‘물리적 상태’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스페인의 GEPA에서는 동일 자료에 해당하는 여러 복본의 물리적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자료의 ‘보존상태’(Support), ‘제본상태’(Binding), ‘전체적인 상태’(Completeness)를 3단계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S3E1C2’는 보존상태 ‘불량’(3), 제본상태 ‘양호’(1), 전체적인 상태 ‘보통’(2)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물리적 상태에 관한 정보는 실물 자료를 보지 않고도 중복자료 중에서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별하고,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지 않는 자료는 '중복'으로 간주하여 개별 도서관에서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폐기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공동보존서고에 이미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자료를 실제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도서관의 목록 DB에서는 '폐기'가 아니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공동보존서고에서 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거쳐 특정 자료만 공동보존서고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경우 자료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자료에 대한 소유 의식(ownership)이 강하고, 개별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정량적 크기에 민감한 우리의 풍조에서 이에 대한 합의나 정책적 결단 없이는 사실상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이러한 소유권은 참여 도서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개별 도서관에 공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관된 자료를 통합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보관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보존서고에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공동보존서고에 온전히 양도하는 '관리전환형'이 바람직하다.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보존서고에 양도되지 않을 경우 공동보존서고에서 재정리나 배가, 수선복원, 폐기처분 등과 같은 관리 방식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개별 도서관에서도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절차에 따른 폐기처분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유권은 양도하되, 개별 도서관의 목록 DB에서는 이들 자료를 제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용자들이 개별 도서관의 목록을 검색했을 때 해당 자료의 소장처에 '공동보존서고'로 표기해 놓음으로써 공동보존서고를 통해 자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자료의 제적·폐기에 대한 도서관의 부담감을 덜어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다. 서비스 방안

공동보존서고의 목적은 자료의 효율적인 수장뿐 아니라 수장된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자료대출서비스, 자료복사서비스, 자료전송서비스,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대출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동보존서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국외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공동보존서고에서는 이용자가 공동보존서고의 서가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의 대출을 해당 도서관을 통해 신청하면, 공동보존서고에서 우편이나 택배,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하여 신청 도서관에 전달하고, 신청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신청한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도서관을 통한 간접 대출을 택하고 있는 까닭은 자료대출

에서부터 반납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참여 도서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를 분실할 경우 해당 도서관은 동일한 자료 또는 대체자료를 구하여 공동보존서고에 제공하거나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부산시에서도 국외의 공동보존서고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서가 접근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의 조사에서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 이용'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서가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공동보존서고를 방문하여 자료를 신청하여 대출하거나 신청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속간행물의 기사나 단행본의 일부분에 대한 복사(photocopy)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속간행물의 기사나 단행본의 일부분을 디지털 스캐닝하여 이용자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자료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보존서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동보존서고에서는 효과적인 자료의 수장 뿐 아니라 수장된 자료에 대한 적실한 제공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공동보존서고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를 공동 시설에 보관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말 현재,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의 마련은 차치하고 건립의지를 표명한 지역 대표도서관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대표도서관 중에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곳은 현재로서 부산광역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부산시의 상황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모델 및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장 실태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에

29) 이외에도, 공동보존서고의 '자료 배가 방식'도 이용자의 서가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외의 공동보존서고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일정 분량(서가의 1단 또는 자료수장용 박스(bucket) 1개의 분량) 확보되었을 경우 일괄 배가하는 '크기별' 배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서가 중간에 향후 추가로 삽입될 자료를 위해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서가 브라우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가 방식을 적용하는 공동보존서고는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처럼 부산지역 전체 공공도서관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 바가 거의 없었으며, 나아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에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도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번 연구에는 수록하지 못하였지만,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보존서고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여 부산시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 실무진의 의견과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타 지역의 도서관 사서, 건축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하여 최종 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 연구는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건물의 설계 및 건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가 완료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더라도 최종 완공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2018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팀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이면 현재와 같은 자료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부산지역의 29개 공공도서관(분관 포함) 중에서 3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가 부산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을 촉구하고, 더불어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어렵פות이 인지하기 시작한 타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참고문헌

- 강현민.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29-53.
- 곽동철.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 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pp.129-150.
- 윤희윤.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이제환.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3.

- 조용완.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1권(2003), pp.130-145.
- Bridegam, Willis. “Print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The Five College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8, No.1(2004). pp.29-38.
- Henriksen, C. H. “The Danish Repository Library for Public Librarie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5, No.2(1992), pp.21-24.
- Kempf, Klaus. “Storage solutions in a co-operative library system: The case of Germany/ Bavaria.” *Library Management*, Vol.26, No.1(2005), pp.79-88.
- Kohl, David F. “Paper and Digital Repositories in the United States.” *Liber Quarterly*, Vol.13(2003), pp.247-248.
- Nitecki, Danuta and Curtis L. Kendrick. *Library Off-Site Shelving: Guide for High-Density Faciliti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2001.
- O'Connor, Steve, Andrew Wells, and Mel Colier. “A Study of Collaborative Storage of Library Resources.” *Library Hi Tech*, Vol.20, No.3(2002), pp. 258-269.
- Payne, Lizanne.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OCLC Programs and Research* (2007) <<http://www.oclc.org/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7/2007-01.pdf>> [cited 2011. 12. 5]
- Russell, Judith 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federal depository libraries in the digital age.” *Against the Grain*, Vol.22, No.5(2010), pp.32-36.
- Seaman, Scott. “High-density off-site storage in North American research libraries”, *The 25th IATUL Annual Conference*(May 30-June 3 2004), p.3. <http://www.iatul.org/doclibrary/public/Conf_Proceedings/2004/Scott20Seaman.pdf> [cited 2012. 1. 30]
- Young, Heartsill.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ng-Wan. “A Study on a Collaborative Project for Repository Library.” *Bulletin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Council*, Vol.21(2003), pp.130-145.
- Glossary Committees.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 Kang Hyen-Min.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1(2006), pp.29-53.
- Kwack Dong-Chul.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 Lee Jae-Who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Seoul : Hanul, 2003.
- Shin Ji-Yeon, Kim You-Seu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3(2011), pp.129-150.
- Special Committee for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 Yoon Hee-Yoon. *A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of Repository Library at a Local Level*. Seoul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